

2026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창립 발대식 및 제1회 학술세미나 발제 1

소방·재난,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AI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2026. 9. 18. 원주시청 · 정정본 2026. 9. 17.

사단법인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장 박기관

불이 나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이 갇힙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이 한 문장의 물음에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의 출발점

기술은 이미 현장에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관측은 정밀해졌고 예측은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놓치는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도입을 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규정을 고치고, 사람이 익히는 일이 남습니다.

늦추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은 **칸막이**, 해법은 **분권과 이양**, 방법은 **AI**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발제는 그 가운데 기관 간 협력체계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하나의 재난 앞에 여러 개의 지휘선이 서는 구조, 그 구조가 치르게 하는 대가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각국이 칸막이를 깨는 두 갈래 길, 그리고 분권이라는 한국의 선택지

셋째

도구로서의 AI

행정 구조의 재설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도구, AI 행정허브 모델의 제안

첫 째

칸막이의 비용

하나의 재난 앞에 여러 개의 지휘선이 서는 구조, 그 구조가 치르게 하는 대가

첫째, 칸막이의 비용

213시간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149시간을 끌었습니다.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한 계절의 불이 한 세대의 터전을 삼켰습니다

주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 (2025. 3. 영남권 산불)

213시간



산청 산불

149시간



의성발 산불

※ 피해면적·주택·인명·피해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정 집계 (2025. 5. 2.)

※ 역대 최대 여부: 산림청 산불통계(1986년 이래)

산림 약 10만 4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1.7배.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주택 3,848동, 사망 27명

진화대원 3명·공무원 1명은 별도 집계. 피해액은 1조 818억 원에 이릅니다

대책이 없어서 당한 참사가 아닙니다

참사 이전까지 역대 정부는 큰 재난마다 중앙 주도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의 불, 두 개의 지위부, 산불 대응제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학문의 세계를 향유하고, 지식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색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색을 위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색을 위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색을 위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illegible]

하나의 불, 두 개의 지휘부

[illegible][illegible]

진화의 전문성은 소방에 있다

사건은 이렇듯 진행되는데, 이같은 사실은 결국 이같은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받고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결국 이같은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받고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결국 이같은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받고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된 사건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발제자 특별기고 원고 1면

첫째, 칸막이의 비용

"하나의 불을 놓고 소속 부처가 다른
두 조직과 단체장이 각자의
지휘선을 세우는 셈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의 통합지휘본부와 재난안전법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그리고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이 **같은 현장에** 섭니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 박기관, 「하나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미간행 원고, 2026

※ 통합지휘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법률 제20751호, 2026. 2. 1. 시행)

첫째, 칸막이의 비용

같은 목표가 이미 문서에 있었습니다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 1. 27.

"제도는 거둬 손질되는데
현장 작동성의 문제는 반복되어 왔다"

※ 박기관, 같은 기고, 2026

참사 두 해 전에 이미 「현장 작동」을 국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문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대로여서** 반복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종합대책이 지자체 재난조직 모델과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까지 내려간 것은
그래서 앞선 대책들과 다른 시도입니다. 오늘 발제는 그 다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칸막이의 비용

"산림청, 소방청,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며 산불 발생 시
일사천리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 11. 6.

문제의식은 국정의 최고 수준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남은 것은 누가, 어떤 구조로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각국이 칸막이를 깨는 두 갈래 길, 그리고 분권이라는 한국의 선택지

reduction strategies since 2015 and the considerable progress made in regional and sub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2.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he engagement and inclusion of all of society i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express appreciation for the critical role played by non-State stakeholders in implementing the Sendai Framework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23. We reiterate that,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on disaster risk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more needs to be done. We recognize the need for enhanced support to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for greater engagement with local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African countries, as well as income-income countries facing specific challenges.

24. We express concern that silos within and betwee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limit coordination between disaster risk reduct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ies and plans, as well a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plans, includ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that a lack of national legal framework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hamper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endai Framework.

25. We stress the need to enhance coordination, coherence and integration between disaster and health risk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26. We call upon States to strengthen comprehensive disaster risk governance, taking into account their national circumstances, needs and priorities, including by:

(a) Strengthening national multi-hazard risk governance with the full engagement of all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by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national platform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or similar mechanisms, to strengthen coordination across ministries, institutions and sectors at all levels; mapping existing policy architecture and capacitie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addressing gaps and assig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cross ministries and institutions, as needed; and ensuring that all sectors at all levels have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and strategies in place;

(b) Supporting and enabling all local authorities to have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and local platform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or similar mechanisms, in place,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for multi-hazard risk governance with the provision of financial assistance, technical support and capacity development; promoting local ownership through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 approaches; and participating in the Making Cities Resilient 2030 initiativ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cities;

(c) Ensuring that disaster risk governance is supported by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policies and plans at all levels that reflect responsibility to reduce disaster risk, including through risk-informed decision-making and investments as well as regulations for land-use and urban planning and building codes, as needed;

(d) Promoting the full, equal, meaningful and inclus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women, older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role of youth, volunteers, academia, scientific and research entities and networks, business, professional associations, private sector financing institutions and the media, in all forums and processes related to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including for gender-responsive and disability-inclusive disaster risk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ndai Framework.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원문 5쪽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국가·지방 기관의 내부와 기관 사이의 칸막이(silos)가 재난위험경감과 개발·경제·기후 정책 사이의 조정을 제약한다"

"We express concern that silos within and betwee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limit coordination between disaster risk reduction, biodiversity conserv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ies and plans, as well a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plans"

※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샌다이프레임워크 중간평가 정치선언 제24항, 2023. 5. 18. 채택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일본은 위로 모았습니다

방재청 설치법이 올해 7월 참의원을 통과해 11월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리가 조직의 수장을 맡고, 전임 방재대신을 두며, 정원 352명(정부 정원심사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방재대신에게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주고, 각 부처에 존중 의무를 지웠습니다.

부처 위에 조정 권한을 세워 칸막이를 넘는 길입니다

※ 방재청설치법 2026. 7. 13. 참의원 가결·성립, 지지통신 보도 기준. 발족 전이므로 창설 완료가 아닙니다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미국은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지역이 실행하고, 주 또는 부족정부가 관리하며,
연방이 지원한다"

"locally executed, state or tribally managed, and federally supported"

미국 대통령 직속 FEMA 검토심의회는 올해 5월 최종보고서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의
운영·재정 책임을 주와 지방정부로 더 크게 옮기라고 권고했습니다.

※ FEMA Review Council 최종보고서, 2026. 5. 7., 5쪽. 전미도시연맹(NLC)·초당파정책센터(BPC) 정리 병행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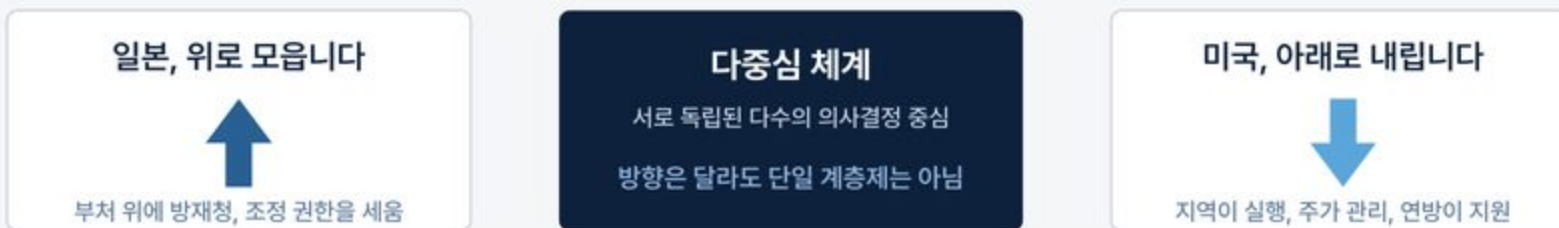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행정학은 오래전에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다중심이란 서로 공식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의사결정 중심을 뜻한다"

"'Polycentric' connotes many centers of decision making that are form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1961 · E. Ostrom 노벨강연문(2009) 재인용



1961년 **빈센트 오스트롬**이 대도시권 행정을 놓고 제시한 **다중심 체계(polycentricity)** 개념입니다.

뒷날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를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로 모으는 일본과 아래로 내리는 미국, 방향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일 계층제로는 복합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재난 분야 적용은 Djalante et al.(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참조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과제목표**

-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 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 **기대효과**

-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 88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원문, 과제 5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국정과제가 이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가 과제의 목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행안부), 2025. 9. 16. 국무회의 확정

※ 국정49는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국정53은 국세 대 지방세 7:3을 명시합니다

분권은 재난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한국의 길은 분권입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복지부동을 낳고,
책임 없는 권한은 혼선을 낳는다"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하향식 관리체계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중앙이 틀어진 재난관리를 현장이 움직이는 재난관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권은 통합의 반대가 아닙니다.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통합대응의 조건입니다.

※ 박기관, 같은 기고, 2026

발제자가 걸어온 연구의 계보

오늘의 세 논지는 이 2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2006	도농통합의 성과평가: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 , 지방행정연구 20(3) 발제자가 바로 이 도시, 원주의 통합 효과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2008	직무만족·조직몰입의 결정요인: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 지방행정연구 22(2) 발제자의 최다 피인용 연구, KCI 피인용 184회(2026. 9. 17. 기준)
2009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의제로 제기
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 한국정책연구 12(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2014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 한국정책연구 14(1)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2021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 실시 성과평가와 소방조직체계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 사무이양의 눈으로 소방조직을 설계한 연구, 소방행정학회와 공저
2026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분권 연구 20년의 결론을 AI 시대의 행정 구조 설계로 잇습니다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역할을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축소가 아니라 재정립입니다. 각자 가장 잘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예방·대비·복구

산림청, 예방·대비·복구의 주관으로

숲의 구조와 생리를 아는 기관이 대응 이전과 이후의 총괄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진화

소방, 훈련된 전문 조직이 현장 작전으로

인명구조는 이미 소방의 법정 소관입니다. 옮겨야 할 것은 진화 하나입니다

주민 대피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아는 정부가 책임지고

분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 부여가 정부의 올해 과제이고, 올여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산불의 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함"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특별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2025. 6. 27.

※ 읍면동장 대피명령 권한 부여는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30쪽. 시행은 행정안전부 여름철 대책, 2026. 5. 12.

둘째, 세계의 응답과 한국의 길

이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리적 분산을 넘어
의사결정권의 분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무만 내려보내는 이양은 분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돈과 데이터가 함께 가야 합니다.
유엔도 지방정부에 재정지원, 기술지원, 역량개발을 제공해 다중재해 위험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양을 받는 지방정부의 사람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발제자의 최다 피인용 연구가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박기관, 자치분권포럼 발표, 2025 /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제26항(b) / 지방행정연구 22(2), 2008

셋째

도구로서의 AI

행정 구조의 재설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도구, AI 행정허브 모델의 제안

셋째, 도구로서의 AI

"AI 전환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행정 구조의 재설계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AI 전환이 더딘 이유는 기술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행정 조직 구조가 AI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발표, 2026. 2.

셋째, 도구로서의 AI

AI 행정허브 모델

지방정부를 플랫폼 허브로 삼아 시민, 부서, 민간을 연결하고 AI가 이를 매개합니다



※ 박기관,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pp.1~23, 2026.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서지

셋째, 도구로서의 AI

93.4%

강원도가 AI 당직원 도입 전 2년간 당직 통화 7,538건을 분석한 결과, 5분 안에 끝나는 단순·반복 민원의 비중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근거로 2025년 AI 당직원을 도입했고, 원주시도 2026년 스마트 AI 당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실험, AI 전담 조직 신설, 건강보험 양대 기관이 함께 있는 데이터 입지.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5. 8. 12. / 원주시 행정국 시의회 업무보고, 2026. 7. 22.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연구 28(1), 2026, 9쪽. 바로 이 도시에서 오늘 학회가 창립합니다

셋째, 도구로서의 AI

결국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AI 허브 구축은 부서 간 데이터 공유, 권한 재배치,
규제의 유연한 조정이라는 정무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정비되지 않으면 AI 허브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조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데이터 전략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발표 요지, 2026. 2.

8) 전략분야 지역 AX

(1) 비전 및 미션

"AI × 5국 3특 = 깨어난 DNA+, 살아난 지역, 희망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권역별 AX 전환을 촉진하고 5국 3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형 지역혁신 모델을 구현한다. AI시대에는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수록 산업 전반의 회복력과 혁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역량이 집중된 기존 구조를 넘어 지역별 분산·확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분산된 산업·인재·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AI 서비스의 품질과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이는 중앙집중형 체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

에서 AI 기반의 지역 AX 전환은 각 지역의 ①D:Decentralized Governance(분권형 거버넌스) 확립, ②N:Networked Infrastructure(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③A: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가속(Acceleration), ④+:삶

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쟁력과 자립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뒷받침한다. 나아가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디지털·AI 인프라가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단일 지역의 혁신이 아닌 '전국 단위의 동시 성장'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균형 있는 국가 성장 모델을 완성하고, 인공지능이 사람과 지역의 삶을 함께 변화시키는 AX 기반 지역혁신 체계를 구현한다.

(2) 행동계획

◆ 총 5개 과제로 구성	
65	5국 3특 K-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여 대표 AI 융합 도시로 육성
66	5국 3특 권역별 성장연진에 기반한 AX 혁신 벨트 조성
67	지역 산단을 지역 AX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거점으로 탈바꿈
68	지역 인재를 활용한 지역 AX 기업 육성 및 지역 창업 역량 강화
69	수요 맞춤형 지역 AX 인재 양성 및 정주형 인재 순환 생태계 조성

- 107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전략분야 8 지역 AX

셋째, 도구로서의 AI

행동계획은 지역 AX의 첫 자리를 분권에 두었습니다

"D : Decentralized Governance (분권형 거버넌스) 확립"이 지역 AX 비전의 첫 요소입니다. 약 200쪽 문서 전체에서 분권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는 유일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107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2. 확정. 지역 AX 실행과제는 과제65~69의 5개입니다

셋째, 도구로서의 AI

흐름은 한 방향입니다

유엔·세계기상기구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

2027년 말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을 조기경보로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AI 실무그룹이 4대 축 전반에 AI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Early Warnings for All, WMO,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

중대위험 거버넌스 권고 개정

사회 전체적 접근을 권고 최상위에 올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과 지방 맞춤 지침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 OECD/LEGAL/0405 개정 초안, 2026. 1~2월 공개협의, 개정 추진 중

대한민국

3특 육성과 강원도의 자리

국정과제는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명시했습니다.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강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49, 2025. 9.

창립하는 학회가 맡을 세 가지 연구

기조강연이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셨다면, 학회는 작동의 구조를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1 **작동성의 규명** 경보가 작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휘·조직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연구 2 **분권의 입법 설계**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사회재난대책법 등 제정 추진 법률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능배분의 조문 설계

연구 3 **AI 실증과 검증** AI 행정허브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원주에서 강원으로, 전국으로 검증을 확장

※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정52의 추진과제. 사회재난대책법 정부 제정안은 입법예고(2025. 12. 19.~2026. 1. 28.) 뒤 2026. 6. 18. 보류 상태(국민참여입법센터, 2026. 9. 17. 확인)

진단은 칸막이였고, 해법은 분권과 이양이며, 방법은 SI입니다

묻는 기준은 하나, 현장에서 작동하는가.
곧 실사구시입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면 현장은 더 신속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소방과 재난 앞에서,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박기관, 「하나의 불, 두 개의 지휘부,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미간행 원고, 2026

박기관, 「지방정부의 AI 행정허브모델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8권 제1호, 2026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대화 가능한 AI 당직원 도입」 보도자료, 2025. 8. 12.

원주시 행정국, 시의회 업무보고 「스마트 AI(인공지능) 당직 시스템 도입」, 2026. 7. 22.

서용모·양기근·양영석·박기관·김찬우, 「창원시의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율적인 소방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금창호·박기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14

금창호·박기관,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12

박기관, 「로컬거버넌스의 실험과 정책과제: 지역사회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9

박기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08

박기관, 「도농통합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10년의 통합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200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원문, 국무조정실, 2025. 9. 16. 국무회의 확정

관계부처 합동, 「극한기후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2025. 10. 2.

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보도자료, 2026. 5. 12.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 1. 27.

국회입법조사처, NARS 특별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2025. 6. 27.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제정, 2026. 2. 1. 시행) 제34조·제35조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 11. 6.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원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2. 확정

유엔총회 결의 A/RES/77/289, 샌다이프레임워크 중간평가 정치선언, 2023. 5. 18.

OECD, 중대위험 거버넌스 권고(OECD/LEGAL/0405) 개정 초안, 2026. 1~2월 공개협의

일본 방재청설치법, 2026. 7. 13. 참의원 가결·성립, 지지통신 보도

FEMA Review Council 최종보고서(Final Report), 2026. 5. 7., 5쪽. 전미도시연맹·초당파정책센터 정리 병행 참조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4), 831-842, 1961

Djalante, R., Holley, C. & Thomalla, F., "Adaptive Governance and Managing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2, 2011